

로컬에서 만나는 평화

- 한 평화·통일교육자의 평화답사 단상(短想)

김진환*

국문요약

평화답사는 폭력의 양상과 이유를 성찰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실천이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답사는 주로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진행됐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DMZ 일원 답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안적인 로컬 평화답사 요구가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로컬 평화답사 활성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한반도 폭력은 제국주의, 한국전쟁, 분단폭력이라는 세 차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폭력들과 관련된 장소를 모두 평화답사 장소로 바라보고 로컬 평화답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DMZ 일원 지역 마을의 다양한 로컬리티를 감각할 수 있는 기획, 한반도 폭력의 다차원성에 주목하는 기획 등을 통해 DMZ 일원 답사를 개선해야 한다.

주제어: 평화답사, 비무장지대(DMZ), 제국주의, 한국전쟁, 분단폭력, 로컬리티

I. 평화답사 일번지 DMZ 일원

먼저 이 글의 주제인 ‘평화답사’부터 정의해보자. ‘답사’의 사전적 정의는 “실제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조

*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reumi21@naver.com

사함”이다. 그리고 이찬수(2016, 84-86)에 따르면 ‘평화’는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폭력이 줄어드는 혹은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의와 견해를 종합하면, ‘평화답사’는 폭력 또는 폭력의 축소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폭력 안에서 폭력을 줄이고 폭력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폭력 없는 세계를 이루려는 희망적 기대”(이찬수 2016, 85)를 키우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달리 말해, 평화답사는 폭력의 양상과 이유를 성찰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실천이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¹⁾의 일환으로 실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단어 자체는 조금 무미건조하게 들릴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정의한 평화답사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마음먹을 때 관성적으로 비무장지대(DMZ) 일원²⁾을 떠올리는 현실은, 현장체험학습이 평화답사의 일종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해준다.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2000년대 들어 DMZ 일원에 ‘평화’라는 장소성이 새롭게 입혀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교사들 사이에서 DMZ 일원은 학생들이 폭력적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 실현 의지를 키우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DMZ 일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며 설정하는 ‘학습 목표’와 평화답사의 목표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다.

사실 DMZ 일원은 DMZ에서 남북 군대 간 대치와 충돌이 계속됐던 1990년대까지는 대중적인 답사 장소가 아니었다. 통일교육원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하거나 군부대를 통해야만 돌아볼 수 있는, 위험하고도³⁾ 접근이 쉽

-
- 1)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단어가 정부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다. 당시 정부는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명칭 변경 배경과 의의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진환(2021, 473)은 연구자, 교사 등의 여러 평화·통일교육 정의를 살펴본 뒤, 평화·통일교육을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을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바라보게 해 주고, 한반도 평화가 결코 통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에 그치지 않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 2) 군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DMZ 안에 들어가려면 유엔사령부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DMZ 답사는 정확히 말하면 DMZ 이남의 민간인 통제구역,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마주하는 공동도·강화도·김포시, 민통선에 가까운 강원 북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 등 ‘DMZ 일원’을 답사하는 것이다.
 - 3)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DMZ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1990년 대만 해도 북한 제31사단 176GP에서 아군 제22사단 717GP로 기관총 3~4발 사격,

지 않은 장소였다는 얘기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기 DMZ 일원의 장소성(placeness)⁴⁾을 상징하는 단어는 ‘안보’였다. 1990년대까지 DMZ 일원, 특히 DMZ 일원에 가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땅굴은, 주로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는 자유와 풍요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이를 적으로부터 지켜야겠다는 마음, 곧 안보 의지를 다지는 장소로 의미화됐었다.

세계적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화해·협력 시대를 열지 못하던 남북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뒤늦게나마 화해·협력을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DMZ 일원의 장소성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DMZ 일원을 화해·협력의 통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와 기업가들의 노력, DMZ 일원의 장소성을 재전유(re-appropriation) 또는 재의미화(resignification)하려는 이들의 노력(함광복 2002; 이시우 2003), DMZ 일원의 변신을 목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간 교사·학생·시민 등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 그동안 대표적인 장소성이었던 대결적 안보와, 새로 입혀진 장소성인 협력적 평화가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때 국군 포로가 건너온 ‘자유의 다리’⁵⁾로 상징되던 임진각은, 2003년에 다시 연결된 경의선 철도를 조망하며 평화롭고 하나가 된 한반도를 상상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추가로 획득했다. 군사적 긴장으로 팽배했던 판문점도 1998년 6월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을 계기로 평화와 통일의 통로라는 의미를 갖게 됐고, 최전방 경계 지역이던 도라전망대 일대에는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 도라산역이 2002년 4월에 세워졌다. 그즈

아군은 M60 20발로 대응(1992년 8월 21일), 북한 제4사단 GP 지역의 아군 제6사단 GP 전방 수색로 개척 작업 중 서로 조우해 소총, 기관총 30여 발 사격(1997년 4월 10일), 철원 제3사단 비무장지대에서 23분간 총격전(1997년 7월 16일), 북한군 12명이 아군 제3사단 지역 군사분계선을 40~50m 넘었다가 아군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돌아감(1998년 3월 12일) 등의 군사 충돌이 이어졌다(조성훈 2011, 126-156).

- 4) 이 글에서 장소성(placeness)은 해당 장소(place)가 지닌 역사적·사회적·개인적 의미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일정한 장소에서 우연적 행위 또는 권력의 수행적 표현이 반복적 재현(representation)과 비재현(non-representation)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장소성(locationality)이 형성되고 의미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장세룡 2018, 151). 장소성은 본질적으로 고착되어 있기보다는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푸코 역시 바로 이러한 장소성의 유동성에 주목해 “끝없이 펼쳐지는 측량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를 주장했다(장세룡 2018, 187, 184-199; 김성민 2021, 15).
- 5) 현재 임진각 ‘자유의 다리’는 관광 자원으로 복원해놓은 다리다. 본래 자유의 다리는 전쟁 때 파괴된 경의선 철교 옆을 따라 철교 절반 높이 정도로 가설돼 있었다.

음부터 도라전망대도 군부대 초소이자, 2004년에 운영을 시작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하는 명소가 됐다. 물론 2008년 이후 남북 대결이 재현되면서 DMZ 일원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이들의 방문 덕분에 DMZ의 장소성이 대결적 안보로 일색화되지는 않았다.

2018년 초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DMZ 일원에는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문제는 DMZ 일원을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이 얼마 뒤 코로나19 유행,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만났다는 점이다. 바로 이 시점에, 그러니까 DMZ 일원 중심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점에, 초·중·고등학교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장 동료가 필자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II. “좀 더 가까운 곳은 없을까요?”

직장 동료가 2020년 초가을 필자의 연구실에서 했던 제안은 이런 것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체험학습이 거의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돼서 다시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해질 때를 대비해, 일종의 현장체험학습 가이드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평소에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라, 그의 제안을 받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두 가지 과제를 바로 풀기 시작했다. 첫째는 이 흥미로운 작업을 함께 할 공저자를 찾는 것이었고, 둘째는 저술 방향을 잡기 위해 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이 책을 활용하게 될 교사들의 기대나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첫째 과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했다. 서울 곳곳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덕분에 알게 됐고, 이후 부산부터 고성까지 7번 국도6)를 따라가며 평화를 이야기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걸 보고 더 친숙해진

6) 7번 국도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의 대한민국 구간이다.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는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연결을 추진하는 국제도로망으로, 6호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고성을 거쳐 북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러시아 극동 지역, 중국 북부 지역, 카자흐스탄 등을 지나 러시아-벨라루스 국경까지 이어진다.

작가 A, 그리고 오랜 시간 필자와 함께 북한·통일문제를 탐구해온 동학이자, 몇 년 전부터 DMZ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연구자 B가 기다렸다는 듯 뜻을 모아줬기 때문이다.

좀 더 풀기 어려운 과제는 후자였다. 초·중·고등학교별로 몇몇 교사들과 줌(ZOOM) 회의라도 해서 구체적인 기대나 요구를 듣고 싶었지만, 답사와 저술까지 몇 달 안에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했다. 그래서 떠올린 게 지역으로 강의를 다니면서 사귀어 영남·호남·충청·제주 교사들과 나눈 대화들이다.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요구를 교사들이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⁷⁾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면, 교사들은 종종 이런 하소연과 질문을 필자에게 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DMZ가 너무 멀어서 학생들과 함께 다녀오기가 쉽지 않아요.” “DMZ가 좋은 건 알지만, 솔직히 가기 힘들고 부담스럽네요. 대신에 학교에서 가까운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없을까요?”

요컨대 DMZ 일원에 접해 있어서 비교적 쉽게 그곳에 갈 수 있는 강원·경기·인천 교사들이 아닌 영남·호남·충청·제주 교사들도,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을 생각하면 관성적으로 DMZ 일원을 떠올렸고, 그렇다 보니 시간, 비용, 안전 등에 더욱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따라서 학교에서 ‘가까운’ 대안적인 평화답사 장소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DMZ 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사들은 그곳이 평화답사에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말하려던 게 아니라, DMZ 일원이 좋은 장소인 건 알지만 그곳 아닌 지역에서도 평화답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그런 말들로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DMZ 일원 평화답사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영남·호남·충청·제주 교사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유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⁸⁾ 그렇기에 뭔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위 지역 교사들의 바람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술 방향 설정이라는 둘째 과제도 아래처럼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요약하면, “지역을 다니면서 눈여겨보고 있었거나 염두에 뒀던 평화답사 장소들을 교사들에게 최대한 소개하자. 그리고 교사들

하지만 한반도 구간은 남북 대치로 사실상 단절돼 있다.

7) 통일부·교육부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교육을 받을 경우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하고 싶다는 학생 응답률은 27.1%인데 비해, 실제로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경험했다는 학생 응답률은 5.4%에 불과했다(현대리서치컨설팅 2019, 136, 148).

8) 이에 대해서는 이 글 IV장에서 서술하겠다.

에게 제법 알려져 있었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았을 이 장소들이 ‘왜’ DMZ 못지않은 평화답사 장소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논리도 이참에 정리해 보자”는 게 답사 채비를 하며 필자가 품은 목표였다.

Ⅲ. 한반도 폭력의 다차원성과 로컬 평화답사

앞에서 평화답사는 폭력의 양상과 이유를 성찰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답사’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폭력의 양상과 이유를 성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실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DMZ 일원 평화답사는 1945년 8월 분단 이후에 발생한 참혹한 전쟁의 ‘지속’을 직시하는 답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요즘도 하루하루 확인하고 있듯이, 한국전쟁은 휴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에 끝난 게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이 DMZ, 서해, 동해 등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폭력을 줄이고 평화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평화답사 주체라면, 이 지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폭력이 DMZ로 상징되는 ‘한국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첫째, 분단의 씨앗을 뿌린 ‘제국주의’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폭력이다. 한반도 분단이 미국과 소련의 북위 38도선(이하 38선) 획정으로 시작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1945년 8월의 ‘지리적 분단’은, 1948년 8~9월 38선 이북과 이남에 두 개 정부가 수립되는 ‘정치적 분단’을 거쳐, 분단을 고착화한 비극적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리적 분단’의 원인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분단이 일제 강점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일제 강점이 없었다면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38선을 획정할 일도 애당초 없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서경식(2011)이 ‘계속되는 식민주의’라는 표현으로 통찰했듯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사라졌어야 할 제국주의가, 일본 우파들의 한·일 과거사에 대한 망언과 횡포, 일본 정부와 우파들의 재일동포 차별과

협박,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사회 구성원 간의 격렬한 충돌 등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에 겪었고, 2022년 현재도 여전히 겪고 있는 폭력이다.

둘째, 독재정권이 대결적 분단을 이유로 내세워 가한 ‘분단폭력’으로 많은 이들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당했고(변상철 2018; 김상숙 2019), 이러한 분단 폭력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정리하면, 제국주의는 분단을 낳았고, 분단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전후 지속된 남북 대결은 분단폭력의 조건이 됐다. 한반도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연결된 세 차원의 폭력을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고, 따라서 이 폭력들의 양상과 이유를 성찰하고, 폭력들을 줄이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한반도 평화답사 장소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필자가 DMZ 일원 외 지역에서 평화답사 장소를 선정한 기준이자, 그곳이 평화답사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다.⁹⁾ 이러한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바라보면 아래처럼 꽤 괜찮은 평화답사 장소가 눈에 들어온다.

첫째, 전남의 교사·학생·시민이라면 ‘목포’를 로컬 평화답사 일번지로 삼아 보자. 목포는 대한제국이 일제의 압력에 맞서 추진했던 ‘자주 개항’의 꿈이 좌절된 도시이자, 구한말 자주적 노력이 실패하면서 시작된 일제 강점기 수탈을 상징하는 도시이다. 목포근대역사관 두 곳(1관은 구 일본영사관, 2관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은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기 좋은 장소이자, 해방 이후 남북 대결 속에서 출현한 독재정권이 분단에 기대어 독재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강화해왔는지 보여주는 사적도 품고 있는 도시다.

목포근대역사관 2관을 나서 오른편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해방 이후 민

9) 당연히 한반도 폭력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식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평화 구축에 기여했던 역사적 사건과 사람들을 찾아서, 혹은 한국인들의 평화를 위협했던 역사적 사건의 공간적 배경을 찾아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김태우(2016, 7)가 찾아간 장소는, 사북의 ‘뿌리관’과 ‘석탄역사체험관’, 국립 5·18 묘지와 금남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철원의 비무장지대와 노동당사 등으로 다양했다.

주를 향한 여정과 관련된 비석 두 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는 4·19혁명 때 희생된 목포 출신 학생 사망자·부상자를 기리는 ‘사월학생혁명 기념비’이고, 다른 하나는 목포근대역사관 2관과 5·18민주화운동의 ‘악연’이 담긴 사적비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에는 1946년부터 1974년까지 해군 목포 경비부가 주둔했고, 1974년부터 1989년까지는 목포해역사령부 헌병대가 이 건물을 사용했다. ‘5·18민중항쟁 목포 사적지 13호’ 비석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게 체포된 목포 지역 5·18 관련자들은 보안대 목포 분소에서 갇은 구타와 고문을 당한 뒤 이곳 헌병대 영창에 구금되었다고 한다(권기봉 외 2021, 245).

목포와 호남을 상징하는 정치인 김대중은 정치 여정 내내 독재정권에 맞섰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남북 화해·협력에 매진했다. 민주주의가 분단과 남북 대결로 억압됐으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절실하다는 게 김대중의 문제의식이었다. 따라서 목포근대역사관 다음으로는, 가까이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자유, 민주, 통일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심화시키고 정리해보자.

둘째, 동학농민혁명 중심지 ‘정읍’은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19세기 후반, 한반도가 분단되고 남북이 대결을 이어가던 20세기를 거쳐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가로막는 ‘지정학적 원심력’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해법을 생각해보기에 좋은 장소다.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안에 있는 전시관, 박물관 등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전개 등을 알아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원심력의 작동을 이해한 뒤, 곧이어 황토현 전적지, 말목장터, 만석보터, 전봉준 고택과 단소, ‘사발통문 작성의 집’, 무명동학농민혁명위령탑 등을 차례로 돌아보며 지정학적 원심력에 맞서 봉건 기득권 세력과 농민의 단결, 곧 ‘구심력 키우기’를 시도했던 그 시절의 열망과 좌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시절로부터 100년이 넘게 흐른 21세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처지가 그 시절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자각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필요성으로까지 사유를 확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읍이다.

셋째, 한반도 폭력의 다차원성에 대한 인식은 ‘부산’의 장소성도 좀 더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동안 부산에서 주목받았던 평화답사 장소는 임시수도기념관, 감천문화마을, 아미동 비석마을, 보수동 책방골목, 영도다리 등 주

로 피난 관련 유적·시설이었고, 이 장소에 입혀진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는 ‘임시수도’, ‘피란수도’ 등이었다(김형균 외 2016; 김홍수 2017; 강동완 2017).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간대와 이론적 맥락에서 부산을 다시 읽으면, 이찬수(2016, 87-92)가 폭력을 줄이는 동력으로 규정한 ‘공감 능력’을 키워 주는 도시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제국주의에 희생되고 상처받은 징용·징병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고통을 공감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 역사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유엔기념공원 역시 ‘자유 수호’를 위한 유엔군의 희생을 기억하는 곳이라는(강동완 2017, 140-141) 장소성만 갖는 게 아니라, 군번과 계급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되고 규정할 수도 없는, 곧 “누군가의 아들, 제자, 선배, 친구”였던 ‘평범한’ 청년의 희생에 공감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이향규 2019, 85, 212-213). 한마디로, 두 시설은 저마다 고유한 사명과 의미를 지닌 장소지만, 묶어서 보면 제국주의와 전쟁이 피난민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 사람들, 참전 유엔군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나아가 이러한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해 주는 장소라는 공통성이 있다(권기봉 외 2021, 288). 따라서 기존 피난 관련 유적·시설에 더해 두 시설을 돌아본다면 좀 더 풍부한 부산 평화답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1894년 갑오의병부터 1945년 안동농림학교 학생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무려 51년 동안 멈춤 없이 전개된 안동·경북 사람들의 항일투쟁을 알아본 뒤, 대한제국이 끝내 식민지로 전락하자 가산을 정리해 서간도로 떠나 항일에 매진한 이상룡의 집(임청각), 글의 힘과 총의 힘을 모두 믿고 항일의 길을 걸었던 ‘이육사 문학관’과 그의 무덤을 돌아보며 아래와 같은 질문과 동행한다면 여행자의 사유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이상룡, 이육사가 꿈꾸던 미래에 과연 분단과 남북대결이 있었을까?”

같은 맥락에서 충북 ‘진천’과 ‘청주’에 있는 이상설 유적지, 손병희 유적지, 신채호·박자해 유적지 등을 따라가는 여정은, 독립에 목숨을 바친 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후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각하는 시간이자, 그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충청남도 ‘천안’ 유관순 사적지와 독립기념관을 찾아서, 남북이 따로 없던 1919년 3월에 천안 아우내장터에서는 유관순이, 함경북도 명천 화대장터에서는 동풍신이 독립 만세를 외치다 서대문 감옥에서 함께 순국한 기억을 떠올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버팀목으로서 좌우 합작을 추구하던 이동녕의 생가와 기념관에서 21세기 남북 합작을 생각하는 것도 평화답사다.

다섯째, DMZ 일원으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서울 교사·학생·시민도 한반도 폭력의 다차원성에 주목한다면 ‘서울’ 평화답사 매력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바로 옆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 묘와 안중근 의사 빈피(허묘), 이동녕·조성환·차리석·김구 등 임정 요인의 묘가 모여 있는 효창공원, 북한산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과 근현대사기념관 등에서는 제국주의에 맞서 평화를 실현하려던 선대의 의지와 구체적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구한말 구국 운동의 중심이자 미·소 공동위원회 무대였던 정동 일대, 남북협상에 매진하던 김구가 총탄에 쓰러진 경교장을 차례로 돌아보는 답사나, 해방공간의 좌우합작운동 지도자 여운형 묘소, 독재정권에 맞선 투쟁을 기리는 국립4·19기념묘지,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문익환의 공간(‘통일의 집’)으로 이어지는 강북구 답사는 통일 독립의 좌절, 한국전쟁과 분단폭력, 그러한 폭력들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1968년 김신조 사태 같은 남북 군사 충돌의 역사를 성찰할 수 있는 한양도성 일대, 독재정권의 고문 시설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¹⁰⁾ 등도 서울에서 제국주의, 한국전쟁, 분단폭력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좋은 장소들이다.

10) 2022년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는 불가능하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전시와 교육 시설을 더한 ‘민주인권기념관’ 공사가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IV. DMZ 일원 답사 개선 방향

한반도 평화답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예를 들어 소개한 대안적 로컬 평화답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평화답사 일번지로 여기는 DMZ 일원으로의 답사도 개선해야 한다. 필자가 현행 DMZ 일원 답사의 개선점으로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앞에서 보았듯이 2000년대 들어 DMZ 일원의 장소성이 유동하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답사 주체들이 짚어보는 기억, 상상하는 미래는 ‘대부분’ 국가적이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DMZ 일원 답사는 주안점이 안보에 있든 평화에 있든, 또는 찾아가는 지역이 교동·강화·김포든, 파주든, 연천이든, 철원이든, 화천이든, 양구든, 인제든, 고성이든 다를 바 없이, DMZ 탄생 이후 군사적 대치와 충돌처럼, 국가가 정립한 기억을 함께 기억하고, ‘평화시(市)’ 설치나 ‘코리아 평화공단’ 건설,¹¹⁾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따른 사람과 물자의 활발한 소통,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처럼, 역시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를 상상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남방한계선 인근에 세워진 ‘전망대’에 도착하면 먼저 통일부, 국방부 등에서 만든 ‘공식’ 영상을 보거나 군인·해설사의 ‘정해진’ 설명을 듣고, 이어서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같은 철조망, DMZ 안팎 군사 초소들, 접경지역의 북한 사람들 등을 맨눈 또는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북한이 판 땅굴이나 몇몇 전시관 등을 들렀다 돌아오는 게 DMZ 일원 답사의 전형적 풍경이다.

이런 방식의 DMZ 일원 답사는, 전쟁이 전선뿐 아니라, 마을과 도시 깊숙이 찾아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는 사실(김귀옥 2006; 최정기 외 2008; 표인주 외 2009; 박찬승 2010; 전갑생, 2020), 38선 이북 지역이었다가 전후 DMZ 이남 지역이 된 ‘수복지구’에도 계급, 계층, 이념 등의 차이로 복잡하게 얹힌 채 서로가 상처 입히고, 상처 입은 기억이 또렷이 새겨져 있다는 사

11) DMZ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활발히 했던 노태우 정부 때 많이 등장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 내 평화시(市)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1990년 11월에는 DMZ를 관광자원, 역사적인 기념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개 특성별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 남북이 공동 투자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고, 1992년 1월에는 DMZ에 50만~100만평 규모로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코리아평화공단’ 조성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김진환 2012, 157-158).

실(김귀옥 2011; 한모니까 2017)을 고려하면, 매우 문제적이다. 교동도부터 고성까지 이른바 ‘민통선 마을들’의 형성 계기나 과정도 다양하고, 각 마을이 겪은 상처와 고통, 기대하는 미래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김일한, 2016; 2017).

요컨대, 현행 DMZ 일원 답사는 DMZ 일원 마을의 다양한 로컬리티(locality)¹²⁾를 인지하기 어렵다. 풀어 말하면, 현행 DMZ 일원 답사에서는 ‘국가기억’ 말고 그곳에 존재할 법한 개인 기억, 가족 기억, 로컬 기억¹³⁾ 같은 다양한 층위의 기억 ‘들’을 만나기 쉽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지인(外地人)이 지향하는 미래 말고 교동·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리는 DMZ의 미래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필자는 2011년 여름에 첫 DMZ 횡단 답사를 하면서 운 좋게도 DMZ 일원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지향을 보거나 들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DMZ 일원 마을들의 로컬리티를 조금이나마 감각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철원군 마현리에서 본 ‘입주기념비’에서 그곳 사람들이 지닌 ‘개척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철원군 양지리 주민이 모닥불 옆에서 들려준 이야기들은 철원 민통선 사람들의 아비투스를 이해하고 ‘지뢰’로 인한 트라우마에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다.¹⁴⁾ 또한 DMZ 일원 마을 사람들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추진하는 DMZ 일원 개발, DMZ 일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지(外地) 단체들의 목소리 등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바람직한 DMZ

12)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성’ 또는 ‘국지성’으로 번역된다. 차철욱(2013, 55)은 ‘로컬 다움’, ‘로컬이 지닌 가치’, ‘로컬의 작동 원리’ 등으로 로컬리티 개념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로컬리티’를 번역하지 않고, 주로 로컬 기억이나 로컬의 미래 구상 등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지는 로컬의 장소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13) 장세룡(2018, 314-317)은 기억의 층위를 개인 기억, 가족 기억, 로컬 기억, 국가 기억 등으로 구분하면서 “로컬 기억은 국민국가의 기억을 대부분 답습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과 의사소통적으로 결합하고 신화적 요소의 영향력이 적다”고 지적한다.

14) 두 이야기 중 하나는 민통선 바깥 사람들이 민통선 사람들을 “오죽하면 천지사방 지뢰밭인 동네에서 살고 있느냐며 비하한다”는 얘기였고, 다른 하나는 한탄강에 물놀이 갔다가 지뢰에 희생된 9살과 6살짜리 동네 아이들 얘기였다(김진환 2012, 171-174).

미래 구상은 DMZ 일원 마을 사람들의 아비투스를 고려하고 트라우마의 치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첫 DMZ 횡단을 통해 가다듬을 수 있었다(김진환 2012).

이후 필자 나름의 DMZ 답사 원칙이 “DMZ 일원에 갈 때면, 철조망과 자연과 함께 꼭 그곳 마을 사람들을 만나자”는 것이 됐음은 물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DMZ 일원 마을 사람들의 삶, 기억, 희망을 전해주는 책들(김영규 2018; 신현탁 외 2018; 임종업 2021)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게 반갑고 고맙다. DMZ 일원 답사가 지금의 전형적 양상에서 벗어나 마을의 로컬리티에 본격적으로 주목한다면, 필자가 운 좋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평화답사 주체들의 폭력에 대한 성찰, 평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것이다.

둘째, DMZ 일원 답사가 ‘지속되는 전쟁’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대한 군사분계선 또는 DMZ 쪽으로 ‘복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필자의 관찰 결과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더 군사분계선 또는 DMZ에 근접한 답사였는지를 기준으로 DMZ 일원 답사를 평가하려는 생각이 답사 주체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민간인이 DMZ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까지 등장하면서, 임진각이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DMZ로부터 거리가 좀 있거나 비교적 출입이 쉬운 곳으로의 답사는 답사를 기획하는 쪽이나 참가하는 쪽으로부터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게, 필자가 당시 평화·통일교육 현장에서 본 모습이다.

하지만, 제국주의, 한국전쟁, 분단폭력이라는 세 차원의 폭력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며 한반도 사람들의 삶에 상처를 입혔기에, 대한민국 다른 모든 지역에서 그렇듯이, DMZ 일원에서도 한국전쟁뿐 아니라 제국주의나 분단폭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역시 이러한 ‘복상형 답사’는 문제적이다. 과연 민간인이 DMZ 안에 들어가도록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 남방한계선 같은 철조망에 최대한 근접해 따라 걷도록 ‘걷기대회’를 기획하는 것 등이 DMZ 일원 답사의 유일한 발전 방향일까? 필자가 몇 년 전부터 답사 참가자들과 DMZ 일원에 동행할 때마다 DMZ나 북한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장소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원하면 함께 그런 장소에 찾아가는 건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천 ‘평화의 댐’은 DMZ로부터 거리가 좀 있지만, 20세기 전쟁과 냉전의 기억, 그리고 남북이 함께 구심력을 키워나갈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지 등 정말 다양한 시간대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다. 평화의 댐 답사는 먼저 비목공원에 들러 전쟁의 비극을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곧이어 평화의 댐 본체를 보면서, 댐 건설이 당시 북한 당국의 수공(水攻) 위협을 과장한 정권 안보용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회고하며 분단과 독재의 관계, 남북이 대결로 치른 희생과 낭비 등을 성찰한다. 곧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염원을 담은 ‘세계 평화의 종’, 탱크, 비행기 같은 무기를 평화 상상력으로 새롭게 해석한 ‘국제평화아트파크’, 댐 벽체에 그려진 트리아트 ‘통일로 나가는 문’ 등을 보면서 평화가 진전되는 한반도, 남북 수자원과 전력 협력의 미래 등을 상상하는 것으로 답사가 마무리된다.

양구에서도 을지전망대, 제4땅굴로 이어지는 판에 박힌 답사 대신 DMZ의 다양한 식물, 특히 북방계 식물 자원을 수집·보존하고, 북한 지역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를 하는 ‘국립DMZ자생식물원’(권기봉 외 2021, 82-84), 일제 강점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시대를 살아낸 화가 박수근의 공간(양구 군립 ‘박수근 미술관’) 등으로 답사 참가자들과 동행한다. 인제에 있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도 폭력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는 DMZ 일원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절실히 전파하는 보물 같은 장소다.

이처럼 DMZ 일원 답사는 DMZ 일원 지역 마을의 다양한 로컬리티를 감각할 수 있는 기획, 한반도 폭력의 다차원성에 주목하는 기획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다.

김진환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한사회의 역사, 구조, 이데올로기를 주로 탐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문학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주는 교훈을 찾는 데 관심이 많다. 『북한위기관: 신화와 냉소를 넘어』(2010, 선인), 『동북아시아 열국지 1: 북·미 핵공방의 기원과 전개』(2012, 선인), 『동북아시아 열국지 2: 팩스 아메리카나의 뒤안길』(2013, 선인), 『대한민국 평화기행』(공저, 2021, 창비교육) 등을 썼다.

참고문헌

- 강동완. 2017.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 부산: 너나드리.
- 권기봉 · 김진환 · 한모니까. 2021. 『대한민국 평화기행』. 서울: 창비교육.
- 김귀옥. 2006.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 강화도 교동 섬 주민들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71호, 40-71.
- 김귀옥. 2011. “분단선 위를 걷는 사람들.” 한국구술사학회 편.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 김상숙 외. 2019.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서울: 푸른역사.
- 김성민. 2021. “‘기억과 장소’: 코리안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공간의 의미.”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기억과 장소: 마음으로 돌아보는 평화여행』. 서울: 씽크스마트.
- 김영규. 2018.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철원주민 20인의 구술사』. 과천: 진인진.
- 김일한. 2016.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17권 1호, 63-93.
- 김일한. 2017. “간헐 평화와 조강(祖江)의 공존 : 경기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18권 3호, 127-151.
- 김진환. 20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시각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57호, 153-186.
- 김진환. 2021. “한국 정부의 통일교육: 역사, 현황, 방향.” 『통일과 평화』 13집 2호, 433-479.
- 김태우. 2016. 『평화를 걷다: 한국현대사 평화답사기』. 서울: 모시는사람들.
- 김형균 외. 2016. 『피란수도 부산 건축·문화자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청 연구』.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김홍수. 2017. “통일교육 현장체험의 장(場)으로서 부산의 발견: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활동 사례.” 『한국민족문화』 63집, 65-94.
- 박찬승. 2010. 『마을로 간 한국전쟁』. 서울: 돌베개.

- 변상철. 2018. 『인권을 먹다: 국가폭력 이야기』. 서울: 네잎클로버.
- 서경식. 2011. 『언어의 감옥에서: 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서울: 돌베개.
- 신현탁 외. 2018. 『DMZ 생태문화지도: 마을편』. 서울: 국립수목원·녹색연합.
- 이시우. 2003. 『민통선 평화기행』. 서울: 창비.
- 이찬수. 2016.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서울: 모시는사람들.
- 이향규. 2019. 『영국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 서울: 창비.
- 임종업. 2021. 『대성동: DMZ의 숨겨진 마을』. 파주: 소동.
- 장세룡. 2018. 『도시와 로컬리티 공간의 지형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전갑생. 2020. 『인천과 한국전쟁 이야기: 한국전쟁 70년, 평화를 묻다』. 서울: 글누림.
- 조성훈. 2011.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차철욱. 2013. “한국전쟁 피란민의 부산 정착과 국제시장 로컬리티의 형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역음.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서울: 소명출판.
- 최정기 외. 2008. 『전쟁과 재현: 마을 공동체의 고통과 그 대면』. 서울: 한울아카데미.
- 표인주 외. 2009. 『전쟁과 기억: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모니까. 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서울: 푸른역사.
- 함광복. 2002.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함광복, 30년간의 DMZ 기행』. 서울: Eastward.
- 현대리서치컨설팅. 2019.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Abstract

Peace Tourism on the Local: A Brief Thought on Peace Tourism by a Peace and Unification Educator

Kim, JinHwan*

Peace tourism can be defined as a phenomenon in which tourism activities should be linked to the goal of peace for visitors. It encourages visitors to think about the aspects and causes of violence and consider a peace perspective. Meanwhile, peace tourism on the Korean Peninsula was mainly conducted in the DMZ area. When the COVID-19 epidemic made it difficult to visit the DMZ area, the demand for alternative peace tours increased.

This article proposes two main tasks to revitalize peace tourism in South Korea. First, the violen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three dimensions: Imperialism, Korean War, and violence related to the divi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eace tourism at the local level by including all places related to this violence. Second, peace tourism in the DMZ area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concepts that include the various places near the DMZ and focus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violence on the Korean Peninsula.

*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reuni21@naver.com

Key Words: Demilitarized Zone(DMZ), imperialism, Korean War, locality,
Peace tourism

논문투고일: 2022. 11. 07.

논문심사일: 2022. 11. 09.

게재확정일: 2022. 11. 16.